



■ 환경부 다이옥신 관리 강화

기존의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에만 적용되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앞으로는 중형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현재 다이옥신이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소각시설 중 중형(시간당 처리능력 200kg이상) 규모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 규모별, 연도별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것이라고 지난 8월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먼지 및 일산화탄소의 규제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량을 저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97년 7월 이후 신설된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0.1ng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설치된 대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0.5ng을 달성한 뒤 2003년 7월부터 0.1ng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기준 강화

환경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토지 또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제의 제·개정시 수질영향에 대한 고려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수질보전시책에 따르면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협의 등의 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고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을 통해 규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토지 또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제의 제·개정시 수질영향에 대한 고려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수변구역의 토지이용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한강법등 관련법률을 제정, 상수원 인접 영향권임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자갈층접촉시설과 수초대를 이용한 자연정화공법도 도

입, 인위적 직강공사와 시멘트호안, 하천복개, 고수부지내 주차장 설치 등을 지양, 자연형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축산분뇨 책임관리제도를 개선, 규제규모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분뇨분리시설과 축분저장 시설, 운동장 덮개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산폐수책임수거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환경범죄 사이트 개설

환경범죄를 제보 받아 실제 수사에 활용하는 검찰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김준규)는 지난 9월 14일 환경범죄 전담 홈페이지(greenseoul.hihome.com)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환경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사이트는 제보용 게시판 외에도 환경범죄 유형과 동향, 관련법규 등을 담고 있으며, 국립환경연구원과 녹색연합 등 환경관련 단체의 홈페이지와도 연결돼 있다.

검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제보내용을 확인하는 내사단계를 거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환경기술 서비스 인기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육성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설치된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14일 지난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첫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에 지난달 말까지 5개월 동안 모두 14만4천명(하루평균 약 1천명)이 접속, 각종 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는 현재 실용화기술 및 환경시장, 설계·시공, 전문인력정보등 10개 분야 12만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마당을 통해 환경기술인력의 취업도 알선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방문자의 80% 이상이 환경분야 종사자들이어서 올해

안에 환경사업화정보 및 환경기술특허정보 등 4개분야, 12만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 환경마크 사용료 대폭 인상

환경부는 환경표지(환경 마크) 사용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사용료 선정방식도 바꿨다. 지난 9월14일 환경부는 현재 3만원인 환경표지 사용 신청 수수료를 10만원으로 3배 인상했다.

이와 함께 환경마크 사용료도 현행 연간 일정액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 적용하기로 했다.

■ 산업폐수 점검 시범사업 스타트

1일 용수량 4만3천톤 절감 기대

대규모 폐수배출업소들이 산업폐수점검 자율 시범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LG마이크론(주), (주)두산주류군산공장, SK(주)울산 공장 등 하루 물 사용량이 1천톤 이상인 전국 24개 대규모 폐수배출업소를 산업폐수 줄이기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8월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폐점검 시범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자체 산폐점검 계획을 수립, 2001년 6월까지 폐수 발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체별 산폐점검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물질약 추진을 위해 전국의 3만7천621개 산업체에서 하루 261만4천톤 방류(하루 발생량 406만8천톤)하는 산업폐수를 오는 2006년까지 50%를 줄인다는 계획에서 비롯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24개 업체의 폐수 재이용률은 현재 27.8%에서 34.2%로 증가하고, 물 사용량도 하루 4만3천여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들의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종합 평가를 통해 산폐점검 사업을 전국의 폐수배출업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산폐점검 시범사업과 병행해 산폐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



브제도를 도입, 산폐 배출 기본 부과금 부과 시 재이용률에 따라 10~80%까지 감면하는 인센티브와 폐수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부과계수를 높이는 역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 정부 환경설비 성능품질인증제 도입**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서 개발된 우수한 환경 설비나 제품에 대해 공식 신뢰성을 입증해 주는 '환경설비 성능품질 인증제'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첫 인증사업으로 한국중공업의 탈황설비 등 7개 업체 11개 품목을 우수 환경설비로 지정, 시범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인증한 탈황설비 등 핵심 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매년 1억 달러이상의 수출 증대와 3억 달러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품질인증 대상 기업은 한국중공업, 한국코트렐, 한라산업개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코오롱엔지니어링, 청우공업 등이다.

**■ 포철, 환경물질 배출 제로화**

포항제철이 배출물질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설비 설치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포철(회장 유상부·劉常夫)은 최근 쇳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물질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을 95% 이상 제거하기 위한 배출가스 청정설비 설치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1년 9월에 착공돼 2002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포철은 오는 2007년까지 1조6311억원의 환경부문에 투자하는 중장기 환경투자계획을 수립, 총 302건의 투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포철 관계자는 『환경오염 방지설비 증설과 더불어 제품 생산시 환경친화적 공법을 도입, 원천적인 공해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생명, 동부제강에 RTO설비 제공**

환경벤처기업인 환경과생명(대표 김남철)은 미국 AES사와 기술 제휴를 체결하고 동부제강 RTO 설비를 20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RTO설비는 제철소에서 철강의 표면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는 설비로 오는 11월까지 제작을 완료해 동부제강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올해 유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RTO설비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용어〉 RTO란 제철소와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휘발성 화합물을 줄이는 설비다.

**■ 남해화학노조, 환경운동연합 맞고소**

전남 여수시 남해화학(주) 노동조합이 여수 환경운동연합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양 단체간 알력이 법정으로 비화하게 됐다.

남해화학 노조는 8월18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일 우리 조합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며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을 이 날 맞고소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당 조합이 그간 환경운동연합의 이런 개입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중하고 올바르게 거둬낼 것을 바랐기 때문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회사와 노조측을 상대로 폭로 과장성 보도 자료를 유포시켰다"며 "이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측의 맞고소에 따라 그간 남해화학-환경운동연합간의 공해 배출 문제를 둘러싼 시비가 노조-환경운동연합간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그간 환경운동연합은 "남해화학이 다량의 폐기물과 방사능 물질을 배출시켜 주변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측은 "환경운동연합이 사실을 과장해 회사와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해 왔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이 회사

측의 약점을 이용, 회사 환경개선 공사에 개입하려는 의혹이 있으며 이같은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등의 노조측 성명서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었다.

**■ 환경부, 취정수시설 국고보조 전환**

환경부는 취정수시설개량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을 국고보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지방상수도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월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시설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취정수 시설과 간이상수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고지원을 확대하거나 예산규모를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의 경우 상당수의 지자체가 총 예산의 1% 이하로 사업비를 책정, 시설개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국고보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간이상수도사업도 현재 광역시는 1개소당 100만원대, 군단위는 20~50만원 정도를 책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지자체로 하여금 개량사업비를 증액토록 하고 필요시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해당지자체 총 예산중 관거정비 예산규모가 0.4~1.8%에 불과하고 일부 시·군은 0.2%에 머무는 등 하수관거정비 예산책정이 시설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 하수관거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토록 하는 한편 하수관거정비 투자예산 규모를 증액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법적·무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수립하지 않고 있어 연내에 수도법을 개정, 수도사업시행자가 5년단위로 물수요관리목표를 정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 시행토록 의무화 하는 한편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시점에 물질약목표 등을 반영, 체계적인 물수요관리시책



을 추진하도록 지침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내년 첫 제정**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다.

시는 시내 고층건물 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등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과 평가절차 등을 정한 조례를 내년 중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대규모 사업 등으로 제한된 현행 법령상의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 교통 인구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제도를 통합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적합한 환경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통합한 형태로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내년 1월부터 대기측정망 운영**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던 대기측정망을 인수, 내년 1월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8월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 대기질 오염도 측정망 6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오염도 측정망 2개소, 대기중 중금속 오염도 측정망 4개소 등 12개소를 내년 1월 인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부터 환경연구직 공무원 5명을 선발, 대구지방환경청에 합동근무토록해 측정망운영기술을 배우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지원을 받아 자료와 전산망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 했다.

시는 대기측정망의 운영으로 대기오염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 오염 방지시설 4만개 교체**

오는 2005년부터 소각 및 발전시설과 보일러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4만개 정도로 추정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교체하고 개선하는데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제58차 회의를 열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지난 8월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황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10배, 먼지는 4배까지 각각 강화되고 염화비닐, 탄화수소 등도 새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산성비와 오존발생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의 경우 허용 기준이 현행 120~700ppm에서 30~540ppm 이하로 강화된다.

시설별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신규시설은 150ppm에서 100ppm, 기존시설은 700ppm에서 270ppm로 각각 조정된다.

일반보일러 가운데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신규시설은 180ppm에서 100ppm, 기존시설은 540ppm에서 270ppm으로 조정되고 고체연료사용 보일러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 150ppm으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

질소산화물은 200~950ppm에서 70~600ppm 이하로 조정되고 먼지도 15~150mg/Sm<sup>3</sup>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발전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4호기의 경우 70ppm으로 강화하고 5~6호기는 140ppm을 적용토록 했다.

또 열병합발전소는 황산화물과 질소화합물도 기존의 배출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의결했다.

다만 포탈산제조시설의 일산화탄소배출 기준은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연말까지 민간합동 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심의

를 거쳐 규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규제강화로 오는 2004년까지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데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시설투자비 부담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당초 2004년에서 1년 늦추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향후 오염원 배출관리제도가 총량개념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법의 정비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중적으로 규제를 받는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원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는데 따른 관계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오염물질별 규제, 또 다른 문제 유발**

**생태계 통합시킨 one-system 정책 촉구**

환경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빈번히 바뀌는 규제제도는 오염물질의 단기적인 문제해결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환경팀은 '환경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오염물질별 규제가 생태학적 의미에서의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사팀에 따르면 복잡다기화된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제제도는, 환경비용의 비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기업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의 특성이나 기업의 기술수준과 재정상태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의 추진은 타당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 수립과정상의 문제도 꼽고 있다.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단체는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의의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이를 배제할 경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립양



상을 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와 기업의 능력한계를 벗어난 복잡다기화되고 경직된 규제중심의 정책도 문제. 정부나 기업, 민간단체간의 적대적이며 상대적인 관계에서는 상호 협조관계 구축과 공감대 확대방안이 결코 마련될 수 없는 만큼 이의 타파를 위한 적극적 모색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대책방안으로 이들은 우선 물, 공기, 토양 등을 통합한 one-system으로 묶는 생태계통합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 폐형광등 '생산자재활용제' 도입 (환경부 내년 서울시 시범 실시-2003년 전국 확대)

매년 1억3,000만개씩 발생.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폐형광등에 대한 재활용체제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수은 등이 포함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폐형광등의 원활한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재활용제'를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8월22일 밝혔다.

생산자 재활용은 형광등 생산업체가 폐기된 형광등을 책임지고 회수·재활용하는 제도로, 현재 가전제품이 올해 8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폐형광등을 발생시키는 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은 단지내 전용수거함에, 단독주택은 동사무소나 판매상에 설치된 수거함에 각각 배출하면 된다.

또 판매상이나 사업장에서 버린 폐형광등은 시·군·구에 설치된 집하장이나 처리시설까지 이송해 주어야 한다.

수거함 등에 모아진 폐형광등은 생산업체가 수거해 자체 처리공장에서 재활용하게 된다.

■ 지하수 개발-이용시 부담금 부과

양수규모 1일 100톤 이상은 허가대상

지하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가가 보전·관리 의무를 지는 공공의 자원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정기국회에 상정

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은 종전의 10년 이내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지하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도 부과된다.

또 양수 능력 기준으로 하루 100톤(농업용은 150톤)이상의 지하수 개발이 이뤄질 경우 허가대상이 되며, 폐기물과 유독물, 축산폐수와 같은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관리, 감시도 강화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전국의 지하수 수문 정보와 개발, 이용 정보, 지질 정보 등 지하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지하수 정보 인프라 체계를 확립,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지하수는 전국적으로 97만여개 폐공을 통해 연간 37억톤(전체 물사용량의 11%)이 채취, 사용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방치된 폐공은 20만~3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환경기술진흥원' 정식 발족

사단법인 형태-産·學·研 연계 환경기술개발총괄

국내 환경기술 개발을 주도하게 되는 '환경기술진흥원'이 9월초 정식 발족됐다.

환경부는 현재 국립환경 연구원에 소속된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사단법인 형태의 독립기구인 환경기술진흥원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진흥원은 국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환경기술개발 10개년 계획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한 재원을 기술개발이 적정하도록 대학·연구소·민간업체에 배분하고 이를 감독·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된 환경기술을 민간에 보급하는 일도 맡게 된다.

■ 신자부, 오염배출 개선에 기술지원

지난 9월부터 기업이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생산공정에 대해 개선을 원할 경우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오염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제거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요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청정생산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도 활성화된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8월23일 확정된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유해물질 배출 업종의 생산공정 개선을 위해 14개 내외의 전문·지도팀을 구성, 무료로 기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 3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내달말경 진단·지도 수행할 기관과 기술지도도 희망하는 업체를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 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및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등 주요 27개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청정생산기술중 2~3개 과제를 선정, 희망업체에게 무료로 이전키로 하고 약 5억원의 기술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진단지도 및 기술이전시 발생하는 비용과는 별도로 시설교체가 필요할 경우 산업기반기금에서 설비교체비까지 연계하여 용자지원키로 했다.

■ 龍仁 쓰레기 지아관로 수송방식 "오용"

배출구서 소각장까지 직접운반-인건비·운반비 절감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쓰레기 관로 수송방식'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말 용인 수지2지구 주거단지에서 '쓰레기 관로 수송방식'을 시범 도입, 이 지역의 약 6,000세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하매설된 관로를 통해 매일 2~3회씩 수거하고 있다고 지난 8월24일 밝혔다.

관로 수송방식은 옥외에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중양제어시스템의 통제로 지하매설 관로에 흐르는 시속 60~70km 고속공기에 의해 쓰레기소각장내 중앙집하장



으로 운반하는 수거시스템이다.

공사는 쓰레기투입부터 수거, 운반, 소각, 매립이 자동처리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문제 등이 해소되고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인건비와 차량운반비 등 간접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자동운반하거나 컨테이너에 자동압축 적재가 가능함으로써 쓰레기처리업의 대표적인 3D(피업종)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 도 덧붙였다.

■ 쓰레기물리 버리다만 '낭패'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산시가 이달 전국체전과 2002년 부산아시아대만 게임, 월드컵 등을 앞두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계도위주에서 처벌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감시 및 단속장비를 구입하고 경비 전문업체를 선정해 투기감시 전담운영반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9월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과 함께 시내 전역의 쓰레기를 모두 치운 뒤 이달부터 집중 감시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10월부터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체납할 경우 재산 및 급여가 압류된다.

또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에 300m 거리에서도 투기자의 얼굴식별이 가능한 첨단 켈러카메라 16대를 무단투기 다발 지역에 설치하고 감시전담반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 분뇨로 폐수장 질소 저감 성공

전남 광양시 태인 오·폐수처리장이 분뇨로 오·폐수처리장의 총 질소를 규제치 이하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광양시는 최근 태인 오·폐수처리장에 시험 도입한 NAP(Nightsoil Application Process, 분뇨를 이용해 폐수·하수의 질소,

인을 제거하는 방법) 공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배출 방류수의 총 질소를 허용기준치 이하로 줄였다고 지난 8월24일 밝혔다.

시는 처리과정에서 오·폐수량의 5% 정도의 분뇨를 섞어 기준치(60mg/l)를 크게 초과한 160-180mg/l였던 최종 방류수의 총 질소 함유량을 20mg/l 이하로 줄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부패한 분뇨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휘발성 지방산(VFA)이 오·폐수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 질소를 다량 소비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려대환경연구소와 (주)파이닉스R&D(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88년부터 이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용량(2천600t/일)에 비해 1일 오·폐수 반입량이 1천t으로 적은데다 당초 개장때 없었던 질소 방류량 규제가 최근 새로 생겨 분뇨도 처리하고 질소량도 줄이기 위해 이 공법을 채택했다.

■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개소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도 시흥시 정왕동)는 지난 8월25일 오후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과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는 앞으로 도내 대학과 연구, 행정기관, 민간기업체, 환경단체 등과 함께 시화, 반월공단의 대기오염 등을 조사하고 오염방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일반인 교육과 환경정보 보급, 환경분석시험 및 환경산업육성 등의 사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 하수처리수 낙차이용 발전시설 설치

충남 아산·천안 각 65·45kW급-가양·난지·전주 등도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낙차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도입된다. 지난 8월29일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수력발전소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경제성이 검증된

충남 아산하수처리장과 천안하수처리장에 천안하수처리장에 올해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소수력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올해 3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산과 천안하수종말처리장에 각각 65kW, 45kW 규모의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또 서울 가양, 난지하수처리장과 전북 전주하수처리장 등도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97년 충북, 98년 서울, 99년 충남에 이어 올해에는 2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 충북, 울산에 대한 하수처리/정수장 소수력 발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대기오염 방지기술 특허출원 증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출원된 대기오염 방지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건수가 199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원된 대기오염 방지기술 실용신안은 모두 323건으로 1998년 188건보다 71.8%나 늘어났으며 특허도 619건 출원돼 1998년 554건에 비해 11.7% 늘어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오존발생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및 회수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돼 1990-1998년 5건에 불과하던 이 분야 출원이 지난해에만 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5월말까지 6건이 출원됐다.

■ 정부, 물오염 기준 등 '국가표준' 정비

산업자원부는 물 오염 기준 등 부처별로 상이한 국가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19개 부처로부터 독자적인 국가 표준 현황을 파악,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지난 9월5일 밝혔다.

산자부는 부처간 상이한 규격을 취합, 국무총리 산하 국가 표준 심의회에 보고한 뒤



통일된 국가 표준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각기 다른 표준이 적용돼 제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국가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음성하수처리장 인기**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보전의 체험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 준공된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은 1만1천9백46평의 용지에 사업비 1백63억원이 투입, 1일 7천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 활성슬러지법을 채택, 시공돼 음성천 및 달천의 수질개선과 남한강 수계의 수질보전으로 생태계 보호 및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곳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난 8월31일 청원군의회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 9명이 시설 현황 등 운영상황 전반에 걸쳐 견학을 하는 등 그동안 초등학생 대학생 수질 관련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등 5백여명이 방문, 하수종말 처리장의 역할과 시설 견학을 가졌다.

■ **안성에 첫 民資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경기 안성시 공동면 전사 지구 내에 4500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추은, 한국, 금호 등 6개 민간건설업체가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을 위해 국내 최초로 민간자본 방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다.

2001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해 1만5750명분의 하수를 처리하게 될 이 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5000m<sup>3</sup>.

안성시에 부담금을 내는 종전의 원인자 부담형식으로 추진할 때보다 t당 1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입주자 부담도 그만큼 줄게 됐다.

■ **반월공단 다이옥신 배출문제 적극 대처**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다이옥신 검출량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따라 시(市)와 환경단체가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반월공단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시민 30명으로 민간환경 감시단을 조직해 24시간 밀착 감시활동에 나섰다.

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권이 없어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道), 인근 시흥시 등과 공동으로 단속업무의 이관을 중앙 정부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 **환경호르몬 관리 '특별법' 만든다**

정부는 전국 생태계 및 대기, 수질 등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광범위하게 검출됨에 따라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가칭)'을 제정,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등이 공동참여하는 범정부적 환경 호르몬 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9월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국가관리목표치 및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식품과 인체에 대한 축적여부를 조사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한 오염실태 조사 및 배출원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식약청은 식품오염 및 인체영향조사 업무, 농촌진흥청은 농약 및 농작물 오염 관리업무, 해수부는 수산물 및 해양오염 관리업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환경호르몬 피해예방 및 관리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특별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전국적으로 검출된 점을 중시, 기존 대형 쓰레기소각장 이외에도 시간당 200kg 이상 중 소형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국 공단지역 및 산업폐기물 발생지역,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 모든 다이옥신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배출원과 배출량의 상관관계를 종합한 배출목록을 작성, 이를 기초로 오염우려지역별 및 업종별 총량규제 등 적극적인 유해물질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건설환경정책 '청사진' 제시**

정부 건설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될 건설환경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이 내년 중 마련된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건설의 실현을 위해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자율환경관리체계의 확립, 건설환경기술·산업의 육성 등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지난 9월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환경정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개정이 추진중인 건설기술관리법에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중 기본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작년 8월 국토연구원에 건설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최종 보고서 접수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사전환경성평가의 강화,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건설환경 정비, 환경시범사업의 추진, 건설환경관리체계의 정비, 환경친화적 건설현장의 정착화, 건설환경기술의 개발·보급 확대, 건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친환경적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환경 정보 및 홍보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 **검단매립지에 메탄가스 발전소**

인천 서구 검단동 수도권매립지에 메탄가스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정주·李定柱)는 지난 9월14일 매립지 가스자원 활용 차원에서 내년초 서구 검단동 매립지안에 6.5MW급 가스엔진 발전시설을 착공, 같은 해 7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은 매립지 지하에 묻힌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연소시켜 시간당 6.5MW의 전력을 생산, 매립지 자체 소요 전력을 충당한다.